용산참사 싸고 또 '싸움질' 불보듯

■ 임시국회 오늘 개회 … 쟁점은

여야, 청문회·쟁점법안도 공방 예고
의사 일정 합의 … 국조는 않기로

'2차 입법전쟁'이 예고된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간 열린다. 또 1·19 개각 등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6, 9, 10일 사흘간 열리고 용산 사고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현안질문은 11일 실시된다.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원내 수석부대표는 1일 낮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용산 참사, 인사청문회,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너무도 확연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 일정**=합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갖는데 이어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재외국민투표권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고, 3~5일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또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자, 9일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용산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일단 11일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으로 대체했다. 국회는 이어 12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신 대법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13, 16, 17, 18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용산 참사**=한나라당은 '선(先)진상규명, 후(後) 책임추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론 향배를 주시하고 있다. 나아가 야권의 강공을 정치공세로 규정,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의에서 엄중한 법집행으로 폭력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아예 '용산 국회'로 규정, 강공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선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용산 참사' 문제를 적극 부각하기로 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청문회에서는 용산사고 책임을 비롯해 'TK(대구·경북)·S라인(서울시청 출신)' 인사 논란과 자질 문제 등을 파고들어 내정 철회를 이끌어내겠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도 화력이 검증된 의원들을 전면 배치키로 했다.

국정조사도 일단 긴급현안질의로 대체됐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협상 직후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를 철회했다기보다 현안질문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국정조사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입법전쟁**=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 ▲미디어법 ▲금융개혁법 ▲떼법 방지법 ▲공직선거 관련법 ▲국회폭력방지 관련법 등 5개 분야 15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으로 선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일괄 협상을 통해 전체 법안의 처리를 추진해 왔던 데서 탈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에게 개별 법안의 협상권을 부여키로 하는 등 법안처리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에는 협조하되, 방송법을 비롯한 'MB악법'은 반드시 저지키로 했다. 특히 임시국회 초반 용산참사를 집중 부각, 기선을 잡는다면 2월 중순 이후 본격화할 2차 입법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상경제 국면에 의식 변화 안보여"

李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화합·소통 강조

"한국 가장 먼저 경제 위기 극복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화합과 소통을 근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치뤄진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관련, "국민이 올해는 인내해 주겠지만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희망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며 "비상경제 국면인데도 아직 다급하고 절박한 의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이 승부수를 띄워야 할 시점인데도 아직 상황을 따라오지 못하는 의식의 변화를 요구한 것.

이 대통령은 98명에 이르는 장차관급 참석자들에게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 코드는 안팎의 '화합'과 '소통""이라며 "장차관들은 자부심과 일체감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긍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장차관의 정책홍보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무위원 15명을 포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등 98명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BS 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가장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내년이 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경기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사고와 관련, 진퇴논란에 휩싸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 문제와 관련, "지금은 내정철회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대북문제와 관련해선 "남북이 오래잖아 협상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출발해 결과가 좋은 게 좋다"고 말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책임자 처벌을" "선동정치 말라"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폭력 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에서 야4당 지도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집회가 열리는 동안 인근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화합' 손 잡을까

李대통령과 오늘 청와대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2일 회동이 여권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들은 2일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 성격의 오찬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표도 참석하며 이는 8개월만의 회동이다.

지난해 5월 단독회동 이후 사실상 만남이 없던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느냐에 따라 여권의 양대 축인 친이-친박 진영 간 냉기류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오찬은 일단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인사말과 건배사로 시작된 뒤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신년인사를 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외형상으로 박 전 대표에게 깍듯한 예우를 갖췄다. 박 전 대표 발언은 오찬 마지막 순서에 잡혀있고, 뒤이어 이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는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좌석 배치도 이 대통령 옆자리에 마련됐고, 공교롭게 이날 57번째 생일을 맞은 박 전 대표를 위해 간단한 축하 케이크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신년 인사회라는 모임 성격을 감안해 구체적인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큰 틀에서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수준의 원칙적인 '한마디'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2월 국회 쟁점 법안 처리 방향과 용산 사태, 경제 위기 등의 현안에 대해 여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비정규직 개정안 처리 논란

당정 "2월 국회서 처리" 야권 "원칙 지켜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세차례 당·정·청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관련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일 "비정규직법을 빨리 (개정) 처리하지 않으면 대량 해고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은 당장 오는 7월에만 비정규직 근로자 97만명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이어서 고용기간을 늘리지 않는 한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 노동단체에선 비정규직 법의 본래 취지인 '2년 후 정규직 전환 원칙'을 지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시키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책임하게 기간만 연장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비정규직 법안의 입법취지는 2년간 비정규직 고용후 정규직 전환이었다"며 "정부의 개정안을 고용불안만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뿐 아니라, 친박연대도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잘못된 비정규직법 개정 강행시도는 약 5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짓밟는 비인도적 행위로써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시의회 임시회
내일부터 10일간

광주시의회(의장 강박원)는 3일 제176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오는 12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4건을 심의, 처리하게 된다.

조례안은 염주골프센터 이용요금 인상(13만원→14만5천원) 등을 내용으로 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안',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광주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등이 다뤄진다.

또 '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